



“안전 표준 만드는 일에 노조 모든 교섭단위 힘 쏟는다”

금속노사, 29일 3차 중앙교섭 열어 ... 작업중지권 요구안 놓고 질의응답 진행

금속산업 노·사가 2025년 금속노조 요구 내용을 놓고 본격적인 쟁점화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4월 29일 오후 금속노조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중앙교섭 세 가지 요구 중 하나이자 19만 통일 요구인 작업중지권에 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사측 역시 올해 작업중지권 요구를 비롯한 현장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에 사측도 동의하는 만큼 오늘 설명을 잘 듣고 금속노조 요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 라고 밝혔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사용자들이 안전 부분에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 금속 노사가 올해 교섭을 통해 현장 안전 발

판을 만들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금속 노사는 이날 노조 전북지부 사무실이 있는 전북 전주에서 올해 첫 지역순회 교섭을 시작했다. 차덕현 노조 전북지부장은 노사 질의응답에 앞서 “전북은 제조업 비중이 낮은 지역이다. 자본이 지역사회 투자, 기업 구성원과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올해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고 말했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과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이 노사 교섭위원 대표로 작업중지권 요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가 있는데도 작업중지권 요구를 제출한 배경을 물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현실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할 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상민 실장은 “실제로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지 못해 산재 사고가 일어난다. 하청노동자 경우, 산안법상 작업중지권은 활자로만 존재한다. 작업중지권이 현실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하는 실효성을 지니려면, 단체협약으로 법률빈틈을 메워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사용자 측은 노조 요구와 현행법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민 실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했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이라고 입을 뗐다.

금속노조는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등으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거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이 불이익 처우 금지 요구는 법률에 있는 내용을 명확화하지는 것. 산안법은 노동자 작업 중지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정한다. 노조는 불리한 처우라는 표현을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사용자 측은 작업중지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작업 중지를 신중하지 않게 발동하거나 상황 착오로 생산 공정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노사 모두 경영 위험에 빠진다. 작업 중지나 거부 행사가 명백한 실수인 경우, 책임지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조 생각을 듣고 싶다” 라고 말했다.

김상민 실장은 “노조 요구에 명시된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에는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라는 전제가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작업중지권 남용까지 보호하지는 게 아니다” 라고 답했다.

이어 김상민 실장은 사용자 측 질문 내용과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실장은 “법원은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작업중지권 사용 판단에 합리성이 있는

지를 본다. 경영 위험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노동자 생명·안전이 경영 위험보다 우선이고,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해야 경영 위험이 해소된다” 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작업중지권 사용 주체의 범위를 묻기도 했다. 노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라고 답했다. 사고 또는 작업 중지 당시에 현장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노동자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작업중지권 요구에 작업 거부 내용이 들어있다. 작업 중지와 거부 차이를 알고 싶다” 라고 물었다. 김상민 실장은 “노동자들이 현장 안전·보건 조치 미비를 알아채고 작업을 거부하기도 한다. 단협에 작업 중지와 작업 거부 내용 모두 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작업중지권은 금속노조 모든 교섭 단위 요구 안으로 알고 있다. 안전 문제는 대공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작업중지권 요구에 관해 각 교섭단위에서 어떻게 다뤄나갈 계획인지 알고 싶다” 라고 말했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금속노조 핵심 교섭은 바로 이 자리, 중앙교섭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과거 주 5일제도 중

앙교섭에서 먼저 합의했다” 라며 “금속노조 모든 교섭 단위는 통일 요구를 최우선에 둔다.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대공장 사업장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금속노조 내부 상황을 묻는 말로 받아들여져 불쾌하다” 라고 사용자 측 질문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는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올해 통일 요구는 문구 수정 없이 원안 생취하겠다” 라며 “모든 교섭 단위가 금속노조 교섭 기조에 따라 작업중지권 요구 생취에 힘 쏟을 것” 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앙교섭 첫 질의응답을 마친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노동안전 표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사가 같이 나아가자” 라고 말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노조 측의 불쾌하다는 표현을 이해한다. 통일 요구인 만큼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작업중지권 문제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바란다” 라고 전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차 중앙교섭을 다음 달 13일 경북 경주 디에스시에서 연다. 올해 중앙교섭 세 개 요구 중 남은 2가지인 ▲기후 위기 대응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